

1회차

헌 법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총론 ~ 기본권총론 기출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023 경찰간부후보생]
 - ①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 ②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 ④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전문(前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법무사]
 - 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②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이므로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 ③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초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 ④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 ⑤ 3·1운동의 정신과 4·19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과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순환(23.01)

헌 법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총론 ~ 기본권총론 유사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② 헌법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전제로 하므로 관습헌법은 헌법개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
 - ④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나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의무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 ②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행위가 헌법 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되더라도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권이나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 및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헌법 전문은 법령의 공포문의 일종으로서 법의 일부가 아니므로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④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 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3.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경정승진]

- ①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④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요 무엇이 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상의 차이도 인정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로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다.
- 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과 정당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헌법개정안의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의결을 하여야 하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된 후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④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삭제, 보완, 삽입하는 등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다.

4.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7급]

- ① 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 ② 제3차 헌법개정(1960년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③ 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전문(前文)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 ④ 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선거관련 헌정사에 대한 옳은 것은?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개정헌법(1960년)부터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 ②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962년 헌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기능을 담당해 왔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설정하였다.
- ④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5. 다음 중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신설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2022 군무원 5급]

- ① 1960년 헌법개정 시
- ② 1972년 헌법개정 시
- ③ 1980년 헌법개정 시
- ④ 1987년 헌법개정 시

6. 현행 「국적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2023 경찰 간부후보생]

- 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라.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5. 국무총리 관련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고, 제2차 개정 헌법은 이중 국무총리를 폐지하였다.
- ②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원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③ 건국헌법(1948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설치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④ 1952년 헌법에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6.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국적이탈할 수 없다.
- ②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국적 이탈 할 수 없다.
- ③ 복수국적자로서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국적에 관한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 국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7.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법무사]

- ① 현행 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 ②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 ③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종래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다.
-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제외된다.

7. 귀화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취득은 가능하다.
- ② 외국인의 처로서 남편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을 신청하는 수반 취득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귀화허가절차를 밟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나,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귀화와 마찬가지로 국적회복허가는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8.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하반기 비상계획관]

- ①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따로 살펴볼 실익은 없다.
- ② 천부인권 사상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낳았고 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 ③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국적회복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8. 귀화허가요건 중 거주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간이귀화의 대상자이므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9. 헌법전문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2022 군무원 5급]

- ① 불의에 항거한 3.1운동
- ② 대한제국의 법통
-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④ 조국의 근대화와 평화적 통일

10. 다음 중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22 해양경찰]

- 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필요적 국선번호제도
- ② 연좌제 금지
- ③ 일사부재리 원칙
- ④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9.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1990.9.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 ② 미연방헌법이 전문을 규정한 이래 1871년 비스마르크헌법과 1919년 바이마르헌법도 전문을 규정해서 헌법전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왔다.
- ③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 전문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나, 칼 슈미트는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한다.
- ④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한다.

10. 다음 중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몇 개인가?

- ㄱ.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35세로 하는 것
- 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올리는 것
- ㄷ. 대통령 선거권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것
- ㄹ.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는 것
- ㅁ. 법관의 임기를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것
- 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5년
- ㅈ. 국회의장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
- ㅇ.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4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022 소방간부]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 ③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
-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지방직 7급]

- ① 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④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11.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살수차,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사용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기준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최루제를 이 중 어떠한 발사장치를 이용하여 분사할 것인지, 최루제와 물을 혼합하여 살수차로 분사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최루제의 사용방법이나 기준까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③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은 반드시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제36조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④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신뢰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 한다.
- ③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 ④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13. 소급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법무사]

- ①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②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공소시효제도는 행위의 가벌성이 아닌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된 것이기는 하나, 소추가능성은 행위의 가벌성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이지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아니다.
- ②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하고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경미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③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 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④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입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공익상의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도 없이 단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상 반기 비상계획관]

- 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ㄷ.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은 위임조항의 수범자인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용부담금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되는데, 동법 제19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 ㄴ ㄷ ㄹ

- ① O O O X
- ② O X X X
- ③ X O X O
- ④ X X O O

14.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한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는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 ④ 법외노조 통보는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15.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023 경찰간부
후보생]

- ①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로 기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 ②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보다는 사전적·일반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나 이로부터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①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운전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은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한 것이다.
- ③ 헌법 제119조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16.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경찰 2차]

- 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③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④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16. 문화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헌법에서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처음 채택하였으며,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 ② 어떤 표현이 가치가 없거나 유해한 경우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다.
- ③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이다.
- ④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7. 헌법상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023 경찰간부
후보생]

- ①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②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 ③ 문화국가의 원리는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한다.
- ④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7급]

- ①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② 헌법 제1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권과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 ③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17.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의 권력은 가분적이고 위임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에서의 주권은 양도할 수 없고 주권의 가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 ③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는 허용된다.
- ④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

18.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된다.
- ②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되어 있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 ③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19.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5급 공채]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19.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정되며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④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써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20.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7급]

- 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③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0.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②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다.
- ③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정된다.
- ④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이나 조약 등에 의하여 충분히 그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거주해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 온 자라면 사실상 국민으로 취급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